고객과 함께하는
동양저축은행
Tel.(062)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61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12월 5일 (음력 10월 15일) 화요일

기아차, 납품단가 5~10% 후려쳐

협력社들 "뭘 먹고 살라고…"

고유가·환손실 고통전가…상생프로젝트 무색

지난 여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파업으로 적잖은 고통을 겪었던 기아차 협력업체들이 이번에는 '납품단가 인하(CR·Cost Reduction)'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현대·기아차가 그룹 차원에서 대대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프로젝트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고유가에 따른 '고통분담'이라는 명목아래 지난해보다 더 가혹한 CR을 요구하고 있어 협력업체들을 옥죄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1차 32개 2천400명, 2차 135개 3천300명, 3차 80개 1천600명 등 247개 7천300명의 협력업체가 있다.

요즘 이들 협력업체의 사정은 죽을 맛이다. 지난 여름 한달여 가까운 광주공장의 파업으로 '만신창이'가 된데다, 차종별·부품별로 5~10%까지 깎인 납품단가를 맞추느라 일년내내 정신이 없다.

1차 협력업체인 A사 K대표는 "지난해에는 100원짜리 부품을 98원에 납품하는, 그런대로 인정할만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해왔는데 올해는 환율하락 등으로 광주공장이 적자를 봤다는 이유로 납품가를 후려치는 바람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 정도라면 올해 20억~30억원 매출손실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1차 협력업체의 고통은 2차·3차 협력업체로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

K대표는 "지난 4월 현대·기아차가 대대적인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해놓고도 CR 강요는 여전하다"면서 "원가절감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한계가 있어 어쩔 수 없이 2차 협력업체에 2.5~5%의 CR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차 협력업체 B사 관계자는 "올초 1차 협력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3%의 CR을 통보받았다"면서 "견디다 못해 인건비부터 절약하기 위해 10명을 구조조정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C사 대표는 "솔직히 모기업이 어렵다면 어느 정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틀리지 않지만, 수지를 맞출 수 없을 정도의 CR요구는 협력업체에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협력업체는 굶어죽고, 광주공장 직원들의 연봉은 5천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무슨 상생이 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CR은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기존 기아차의 CR도 올말까지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 4월 상생프로젝트에 따라 내년부터는 CR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김장배추 출하 4일 매서운 겨울 바람에도 불구하고 영암군 시종면 배추단지에서는 김장 배추를 출하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작황 호조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배춧값(4포기 1단)은 지난달보다 1천원 정도 오른 3천50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고경석기자 ksgo@

선심성 예산 영남에 '펑펑'

7년간 '끼워넣기식 SOC사업' 20조원중 절반 집중

호남지역 3조원 그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낮아 보류 결정이 내려졌는 데도 국회와 정부가 끼워넣기 식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업 규모가 최근 7년동안 각각 13조원, 7조8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심성 예산의 절반 가량이 영남지역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에 집중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예결특위 소속 민노당 노회찬의원이 기획예산처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선심성 예산의 영남 집중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동안 오히려 호남이 역차별 당했다는 사실을 수치로 증명하고 있다. 또 지난 40여년 영남정권 기간동안 정부와 정치권에 뿌리를 내린 탄탄한 영남 인맥의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보류된 사업 가운데 국회가 예산을 반영한 사업은 모두 19건으로, 해당 사업비는 12조8천888억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영남지역 SOC 확충 사업은 대구선 복선전철(1조4천89억원), 통영-거제 고속도로 (1조5천824억원), 안동-영덕 고속도로(1조9천130억원) 등 총 7건에 6조1천68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정부도 사업성이 낮은 영남지역 SOC 사업을 은근슬쩍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7년 동안 예비타당성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업을 끼워넣기 식으로 반영한 경우는 모두 15건, 7조8천268억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영남지역 SOC 사업은 삼랑진-마산 복선전철 사업(1조7천42억원), 부산 정관산단 진입도로 건설(2천807억원) 등 총 6건. 사업비는 3조8천808억원으로 전체 선심성 사업비의 거의 절반이었다.

호남의 경우 국회에서 끼워넣기 식으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 예산은 광주-완도 고속도로, 목포대체 우회도로, 부안-고창 국도건설 등 4건에 2조9천946억원에 불과했다. 영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정부가 반영한 선심성 사업은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 단 1건에 불과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가 반영한 영남지역 선심성 예산

〈단위:억원〉

사업명	총사업비
화원-옥포 국도확장	721
상주-안동 고속도로	9,779
호계-불정 국도확장	914
대구선 복선전철	14,089
통영-거제 고속도로	15,824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	1,223
안동-영덕 고속도로	19,130

■정부가 반영한 영남지역 선심성 사업

사업명	총사업비
삼랑진-마산 복선전철	17,042
동부산 Green City 조성	169
성덕댐 재개발	1,694
통영-거제 고속도로	15,824
부산정관산단 진입도로	2,807
대구경북 한방산업 단지 조성	1,272

"통합신당 지도부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盧, 黨설문조사 반대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의원들을 상대로 당의 진로를 묻는 설문조사를 강행키로 한데 맞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 지도부나 대통령 후보 희망자, 의원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해 노 대통령과 김근태 의장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노 대통령은 4일 '우리 모두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열린우리당 당원에게 드리는 편지를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 "당의 진로와 방향은 그 형태가 어떠하든 정책과 노선을 어떻게 변화, 발전시킬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며 "이 문제는 당 지도부나 대통령 후보 희망자, 의원 여러분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2007 대입 정시모집 요강 ▶8·9면

집값 3.1%⬆…16년만에 최고

한달새 과천 15% 서울 4.8% 상승…광주는 0.1% 올라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이 3% 이상 급등하면서 정부의 '11·15 부동산대책' 이후로도 특정 지역의 '집값 광풍'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10월보다 3.1% 올랐다. 이는 지난 1990년 4월(3.2%) 이후 16년7개월만에 처음으로 3%대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8% 올라 지난 1990년 2월(5.9%)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도 대부분의 지역이 폭등세를 보였다. 과천이 한 달새 무려 15% 급등한 것을 비롯, 구리(14.8%), 수원(9.6%), 군포(9.5%)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광주·전남 등 지방 시·도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게 나타났다. 광주·전남은 같은 기간 각각 0.1%, 0.2% 상승했다. 광주는 남구가 0.5% 올라 소폭 상승세를 주도했고, 전남은 목포와 순천이 각각 0.1%, 0.2% 올랐다. 또 지방 광역시의 경우 울산이 2.6% 상승했을 뿐 부산(0.1%), 대구(0.1%), 대전(0.2%) 등으로 '제자리 걸음' 했다. /최경호기자 choice@